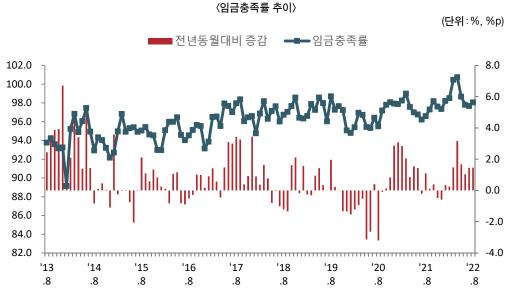
2022년 제8호(통권 제76호) No. 1 / www.kli.re.kr

워크넷 구인구직DB를 이용한 2022년 7월~8월 임금 동향

남예지 (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)

2022년 8월 기준 임금충족률

- 2022년 8월 신규 구인인원은 281천 명, 신규 구직건수는 366천 건, 평균 제시임금¹⁾은 216.7만 원, 평균 희망임금²⁾은 221.1만 원으로 전체 임금충족률은 98.0%로 나타남.
 - 전체 임금충족률의 경우, 전년동월대비 1.5%p 증가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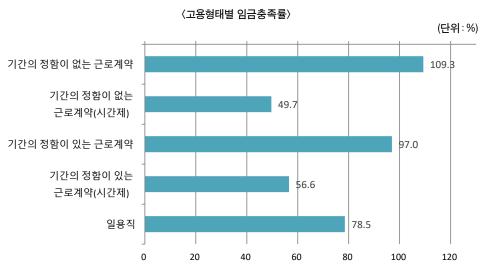
- 주: 1) 좌축=임금충족률(%), 우축=전년동월대비 증감(%p).
 - 2) 임금충족률=(평균 제시임금/평균 희망임금)×100.
 - 3) 임금에서 '분류불능'(응답자 오류) 및 특이값 제외.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「워크넷 구인구직DB」.

¹⁾ 구인업체가 구인서식에 기입한 취업조건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제시하는 임금.

²⁾ 구직자가 구직서식에 기입한 취업조건으로 구직자가 구인업체에 요구하는 임금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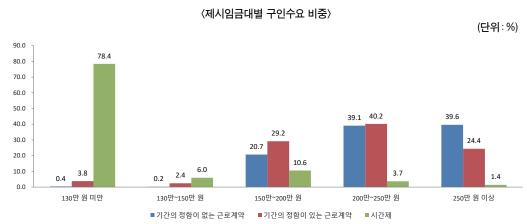
- 시간제를 제외한 전 고용형태에서 임금충족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가운데 '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'에서 3.4%p 증가하며 임금충족률이 109.3%로 가장 높게 기록됨.
 - 반면 '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(시간제)'은 전년동월대비 0.7%p 하락하며 다른 고용형태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(49.7%) 나타남.



주: 1) 임금충족률=(평균 제시임금/평균 희망임금)×100. 2) 임금에서 '분류불능'(응답자 오류) 및 특이값 제외.

자료: 한국고용정보원, 「워크넷 구인구직DB」.

- 8월 고용형태별 제시임금대 비중을 살펴보면, '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' 및 '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'과 시간제 고용형태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.
 - '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'과 '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'은 모두 200만~250만 원에서 구인수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각각 전년동월대비 2,5%p, 6,7%p 증가함.
 - 시간제 고용형태는 130만 원 미만에서 70%가 넘는 구인수요가 발생하는 가운데 130만~150만 원과 150만~200만 원을 제외한 전 제시임금대에서 전년동월대비 구인이 증가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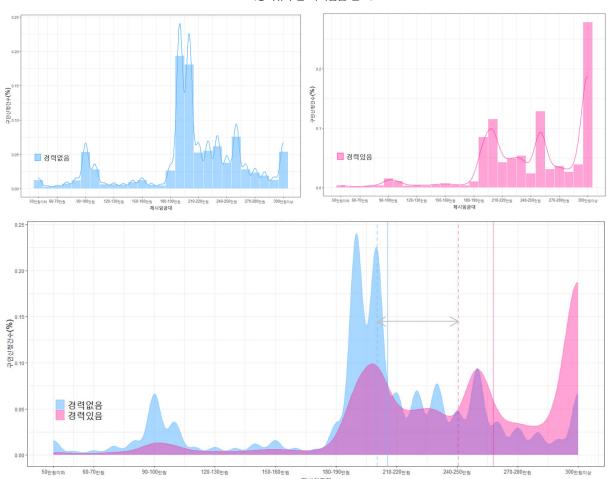
주: 1) 임금대별 구인신청건수의 비중. 2) 제시 '월' 임금임.

자료: 한국고용정보원, 「워크넷 구인구직DB」.

2022년 7월 기준 경력유무별 제시임금 및 희망임금 분포 비교

- 임금대별 구인신청건수 비율을 통해 본 제시임금 분포는 경력유무별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.
 - 신규직은 190만~200만 원과 200만~210만 원을 중심으로 분포가 형성된 반면, 경력직은 300만 원 이상에서 구인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신규직 대비 높은 구간에서 분포가 형성됨.
 - 제시임금 평균(그림상에서 실선으로 표현)의 경우, 신규직은 205.7만 원, 경력직은 258.0만 원으로 나타 남. 분포 평균³⁾(그림상에서 점선으로 표현)으로 보면, 신규직의 제시임금은 200만 원대 초반에, 경력직의 제시임금은 240만 원대 초반에 위치함.

〈경력유무별 제시임금 분포〉



주: 1) 2022년 7월 기준, 근로시간 및 고용형태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임금 데이터임.

2) 제시 '월' 임금이며, '분류불능'(응답자 오류) 및 특이값 제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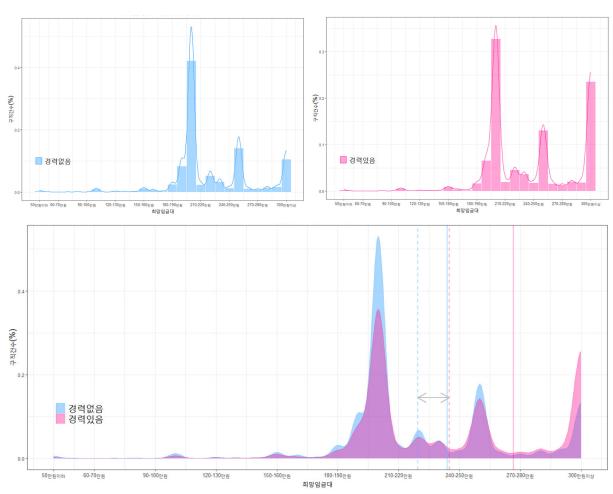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「워크넷 구인구직DB」.

3 임금정보브리프

³⁾ 희망임금을 '50만 원 이하'와 '300만 원 이상'을 양 끝으로 하는 10만 원 단위의 구간으로 나눴을 때(그림의 가로축 참고), 평균적으로 구직 자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의미.

- 임금대별 구직건수 비율을 통해 본 희망임금 분포는 경력유무별로 차이가 다소 있음.
 - 신규 구직자와 경력자의 희망임금은 모두 200만~210만 원에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. 경력자는 300만 원 이상에서도 구직 빈도가 높게 발생한 반면, 신규 구직자는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함.
 - 경력유무별 희망임금 평균(그림상에서 실선으로 표현)의 경우, 신규 구직자가 234.0만 원, 경력자가 266.7만 원 수준임. 분포 평균(그림상에서 점선으로 표현)의 경우, 신규 구직자는 210만 원대 후반에, 경력자는 230만 원대 중반에 위치함.

〈경력유무별 희망임금 분포〉



주: 1) 2022년 7월 기준, 근로시간 및 고용형태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임금 데이터임.

2) 희망 '월' 임금이며, '분류불능'(응답자 오류) 및 특이값 제외.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「워크넷 구인구직DB」.



1. 사업장 개요

상호		L기업	지역	경기	
업종		제조업			
규모	근로자	80명(2021년 말 기준)			
	매출액	167억 원(2021년 말 기준)			
목적		임금체계 개선			
대상		생산직 근로자			
방식		●(직능등급체계 구축) 직무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의 종류와 정도를 단계화 ●(직능급 도입) 호봉제 임금체계에서 직능급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연공이 아닌 직무수행능력에 기반한 임금체 계 도입			
기대효과		● 직무수행능력에 따른 직능등급 부여로 자발적 숙련 양성 및 전수 촉진 ● 직무와 직무수행능력에 따른 보상 차별화로 구성원 동기부여 및 생산성 향상과 법률적 리스크 제거			

2. 개편 배경

- ① 조직 고령화에 따른 합리적 임금관리 필요
 - L사 생산직은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, 시간외근로 등으로 인해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무직에 비해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조직 고령화, 장기근속자의 증가는 회사의 지속적인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물론, 직군 간 위화감 조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 - 특히 L사는 사업특성상 특정 고객사 및 외부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아 사업 다변화 및 저성장· 고령화 시대에 맞는 합리적 임금체계 운영이 필요함.

임금정보브리프

② 근로자 동기부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 필요

- 직무능력 및 역량, 성과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연공급 임금체계는 근로자들의 동기부여에도 악영향을 미쳐 생산성 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음.
- 단기적인 관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나,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어렵고, 무엇 보다 근로자의 숙련개발과 숙련 전수가 중요한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였음.

③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이슈 해소 필요

-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나, 임금 및 복리후생에 차이가 존재하여 명확한 직무부 여를 통한 차별요소 제거가 필요한 상황임.

3. 임금체계 개편

1 개편 방향

- (직능등급체계) 직무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의 종류와 정도를 단계화
 - 과거 생산직의 작업방식은 직무수행능력이나 작업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근로자 1명이 준비에서 정리 까지 일련의 과업을 모두 수행하였음.
 - 과업의 특성과 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직능등급을 설정하고,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능 등급 부여 및 업무수행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함.
- (직능급) 연공이 아닌 "직무수행능력에 기반한 임금체계 도입"
 -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별 직능등급체계 구축과 직능등급별 보상 차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자발적 숙 련 향상을 촉진함
 - 직능등급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근속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상위등급 승격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 동기부여 및 능력중심의 인사를 실현하고자 함.

2. 직능등급체계 도입

- 직능등급체계 마련
 - 직능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생산직 직무분석 및 메뉴별 난이도 평가를 실시하여 최 종 직능등급을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함.

<u>Job</u>	Job Title	<u>직능등급</u>		<u>주요 직능 및 R&R</u>	
생산관리	Head Chef (Team Leader)	C1	■ 파트장	 담당 Kitchen 전반에 대한 생산관리 및 인력관리 영업지원 및 고객대응 품질/위생관리, 생산계획 확인 및 메뉴관리 	
	Sous Chef	C2	■ 과장~차장	 BC/FC Meal 조리 EY Meal 중 일부 중식메뉴 조리 고객대응, 품질관리, 생산관리, 조직관리 등 	
생산	Chef	С3	■ 대리~과장	■ BC/FC Meal 중 난이도 낮은 메뉴 조리 ■ EY Meal 중 일부 메뉴 조리	
	Cook	C4	■ 사원~대리	■ EY Meal 대다수 메뉴 조리	
생산지원	Runner	R1	■ 계약직	■ 원활한 조리를 위한 준비 및 정리 ■ 세정 및 식기 세팅 ■ 홀관리 및 청소	

- 직능등급 설계 시 NCS 수준 체계를 기준으로 L사의 직무, 직무별 역할 등을 고려하여 직능등급 수, 직능등급 개념 및 수준을 정의함.
- 연공급 완화 및 직급 단순화 경향 등을 반영하여 직능등급 단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 하여 이를 신직급체계로 활용함.

■ 직능등급 관리 기준

- 과거 사전에 설정된 승진연한만 채우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승진하던 구조에서 직능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위 직능등급으로 승격이 가능하도록 직능등급을 관리하는 방안과 직능등급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방안을 수립함.



- 특히 이 과정에서 기본 승격연한을 전면 폐지하고, 능력이 뛰어난 근로자라면 누구나 상위 직능등급 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동기부여 및 조직 활력을 촉진하도록 함.

승격심사기준						
평가기준	최소승격기준	비고	기본승격연한	승급방식		
C2 → C1	• C2 승격자			• TO 발생 시 C2 중 인사위원회 에서 최종 결정		
C3 → C2	(3 승격 후 만 3년 이상 근무한 자 (3 승격 후 조리산업기사, 조리기능장, 영양사 자격증 취득자 (3 승격자 중 성과 및 조직 기여도가 탁월하여 부서장 추천을 받는 자 (3 승격 후 요리대회 결선 진출자	◆ 최소승격 기준 중 하나를 총 죽하고, 승격 직전 연도까지 평균 평가등급 B 이상인 자	폐지	• 입학방식 : 최소승격 기준을 충 죽한 대상자 중 승격심사를 거 쳐 결정하는 방식		
C4 → C3	• 입사 후 만 1년이 경과한 자 • 조리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• 조리경력 2년 이상 • 승격 직전 연도까지 평균 평가등급 B 이상인 자	❖ 최소승격 기준을 모두 충족 한 경우		• 졸업방식 : 최소승격 기준을 충 족하면 상위직급으로 자동 승 격되는 방식		
R1 → C4	재계약평가 정규직 전환 평가 실시 과거 평가결과 + 면접평가 + 인사위원회 심의	❖ 평가등급 B 이상인 자	2년	• 정규직 전환		

3. 직능급 설계

- 호봉테이블에서 연봉테이블로 전화
 - 기존 근로자에 대한 직능등급 평가를 통해 근로자 개인별 직능등급을 부여하고, 새롭게 부여된 직능 등급별 기존 임금수준을 기초로 상하한 설정을 통해 연봉테이블을 재설계함.
 - 직능등급 대비 임금수준이 높은 경우 그대로 유지하고, 낮은 경우 임금인상을 실시하거나 승격 대상 자로 관리함.





■ 임금인상방안 마련

-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기존 방식에서 매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인상 하는 방식으로 변경
- 다만, 협업이 중요한 생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무직보다 차등폭을 좁게 설정함.

임금인상률표

평가등급	Α	В	С	최대격차
기준	α+0.5%	α	α-0,5%	
실지급 률	2,5%	2.0%	1,5%	1,0%
인원비율	20%	60%	20%	

- * α : 기준인상률
- * α가 1.0% 이하인 경우 대표이사가 따로 정함
- * Base-up 별도
- * 기준인상률 a가 2%인 경우 예시
- 임금체계 전환에 따라 임금수준 변화 및 불이익변경 최소화를 위해 기존 호봉승급률을 베이스업 (Base-up)으로 보장하고, 상위 직능등급으로 승격 시 기존 승격가산율을 동일하게 적용함.

4. 기대효과

- 직무수행능력에 따른 직능등급 부여로 자발적 숙련 양성 및 전수 촉진
 - L사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모색 중에 있어 숙련 근로자 양성 및 조직 고령화에 따른 숙련 전수가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, 기존 연공 서열중심의 인사제도를 직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이를 뒷받침함.
- 직무와 직무수행능력에 따른 보상 차별화로 구성원 동기부여 및 생산성 향상과 법률적 리스크를 제거 한.
 - 직무수행능력에 따른 보상 차별화를 통해 구성원 동기부여 및 조직 활력을 제고함.
 - 과거 호봉제하에서 비효율적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.
 - 직무를 기반으로 업무를 구분하고,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능력중심 인사제도를 구축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소지 제거를 통해 관련 법률을 준수함.